

비핵화·체제보장...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 열다



북·미 세기의 악수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트럼프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 4개항 합의 공동성명

북미정상 합의 4개항

- ① 북미 새로운 관계 수립
- ②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③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 ④ 전쟁 포로·실종자 유해 송환

북한과 미국은 12일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 구축,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의 목표를 담은 포괄적인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관련기사 2·3·4·5·10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2분(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140여 분에 걸친 단독·확대정상회담과 업무 오찬을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에 사인했다.
양국의 공동성명 1항에는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두 국가 국민의 바

람에 맞춰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2항에서는 "두 국가는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이어 3항에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은 명시되지 않아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미 양국의 추가적인 비핵화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기대를 모았던 종전선언도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4항에는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 수립과 관련한 이슈들을 놓고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중대 걸림돌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약 10년만에 재가동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 68년간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중대한 일보를

내디디게 됐다.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매우 빠르게 그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후속 비핵화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틀림없이 초청할 것"이라며 후속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훈련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종전선언과 관련, "종전이 곧 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주한미군을 데려오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청와대를 예방해 6·12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



4년을 좌우할 당신의 한 표 우리동네 일꾼 잘보고 뽑자

지방선거 오늘 투표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 투표일이 밝았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 일꾼들을 우리 손으로 뽑는 날이다.
이날 선거는 앞으로 4년, 더 나아가 10년 이상 지역의 미래 변화와 자녀 교육을 좌우할 수 있는 지역 일꾼을 선택해야 하는 유권자의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인 만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된다. <관련기사 6·7·8면>
13일은 광주·전남에서 423명의 내외국인 유권자 2명의 국회의원 선거와 유권자마다 시장과 도지사, 시도교육감, 시·군·구의원, 정당 비례대표 등 모두 7명을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재선거에 나선 국회의원 후보 1명도 더 뽑아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대형 이슈로 시작된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들 대형 이슈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공 저지를 속에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시작된 광주·전남 지역 지방선거는 선거운동 기간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후보 간 상호비방, 고소·고발 등 '혼탁선거'로 마무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독주 속에서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는 '중양정치'가 아닌 '풀뿌리 지방자치 선거'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과 치열한 대결을 펼쳤다. 이 때문에 일부 격전지 선거구에 대한 선거결과가 주목되며, 광주·전남 유권자의 선택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우리 일상과 밀접한 지방자치에 이끌려 지역살림을 책임지는 인물을 뽑을 수 있다. 당선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은 공무원의 인사권과 예산편성·집행권, 인허가권 등 막강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갖고 있어 이들의 결정에 따라 지역의 미래 발전과 쇠퇴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막강한 권한을 약속한 비리로 인해 단체장이 중도사퇴한다면 주민의 '혈세'를 들며 또 다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제다. 앞서 해남과 보성·무안군수 등이 개인 비리로 낙마하면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내는 세금을 올바르게 쓰고,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연·지연·확연·정예 입힌 '물지마 투표'가 아니라, 전과·재산 등 인물의 살아온 삶과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이 있는 지 여부 그리고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 등을 간간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 정치에 매몰되기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원래 취지를 되새기고, 거대 정당이 지역주민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번 선거에서 이뤄야 할 목표다. 아울러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광역·기초단체장을 잘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역량있고, 책임감 있는 지방의원들을 잘 뽑는 게 유권자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최권익 기자 cki@kwangju.co.kr